

김관영 도지사, 시·군 순회방문 - 장수·무주

‘더 특별한 전북, 장수와 함께’

육십령 가아이유터
 조성 관련 논의 진행
 스마트팜 장수뉴젠 찾아
 애로 청취·관계자 격려
 장수농업단체협 찾아
 도민과의 대화 진행



시·군과 함께하는 더 특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15일 장수군을 방문한 김관영 도지사가 최훈식 장수군수와 함께 일본을 비롯해 유명 프랜차이즈에 토마토를 납품하는 스마트팜 장수뉴젠을 찾아 토마토 수확체험을 하고 있다.

장수군은 올해 초 시군 순회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김관영 도지사와 '더 특별한 전북시대, 장수군과 함께 혁신! 함께 성공!'이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도정과 군정을 공유하는 값진 시간을 가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15일 오전 장수군을 방문하고 1일 만에 장수군으로 귀환해 간부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청원과의 만남 토마토 농장인 장수뉴젠 방문,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발전 및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군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는 최훈식 장수군수와 간부들이 참석한 간부회의에서 제16회 장수한우랑사과랑 축제 성공적 개최, 농림부 주관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선정 등 작년 한해 장수군의 성과를 치하하며, 제20대 대선 지역 공약 및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에 반영된 백두대간 산림정원 조성 국가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당부했다.

장수군은 △장수 노하숲길(소로-5) 통행 개선공사 △장수 번암면 죽림교 재개설 공사 △장계면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 △동서회합 육십령 가아이유터 조성사업 전라북도 1순위 반영 등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군은 인도 및 자전거 도로 부재로 통행 주민들의 사고 위험성이 높은 노하숲길 도로의 확포장 필요성을 설명하고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으며, 특히 현안 때문에

는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수재 대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원사업에 신규 농가는 신청하기 어려움에 토로하며, 지원조건 완화로 농촌일손 문제 해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장수군농업단체협의회(회장 류기행) 관계자 등 도민과의 대화에서 "미래농업 중심 부자농촌 장수 실험을 적극 지원하며, 장수군을 부자농촌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최훈식 군수님과 농업관계자분들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류기행 회장은 전북도와 장수군 농업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농촌고령화로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한 만큼 농민부담이 큰 농기계값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최훈식 장수군수는 "더 특별한 전북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김관영 지사께서 장수군을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 군민을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도정의 목표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장수군이 함께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희망 나눔 행복공동체 무주’

태권도 사관학교
 스마트팜 등 현안 논의
 무주원·목재체험장 등
 찾아 현장 간담회



시·군과 함께하는 더 특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15일 무주군을 방문한 김관영 도지사가 황인홍 무주군수와 함께 청년 창업 스마트팜 무주원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김관영 지사가 15일 무주군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전북의 성공시대, 무주군과 함께 연다'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간부회의를 시작으로 청원과의 만남, 무주원(스마트팜) 방문, 무주군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무주군은 이날 '1일 무주군수'로 위촉을 받은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도청과 군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먼저 간부회의를 갖고 "희망을 나누는 행복공동체 무주" 실현이라고 하는 무주군의 올해 비전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등 △글로벌 태권시터 도약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천마 스마트팜 재배시설 조성, △관광특구 내 집단시설 시설개선 등 무주군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국제 태권도 주신 것에 대해 군민을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도정의 목표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장수군이 함께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스마트팜 임대농장 조성 사업비 93억9,000만원 중 광역 소멸기금 70억원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무풍면 지성리 울오선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비 12억 원(총 사업비 25억 원)지원을 건의하는 등 강력한 '무주발전 군민행복 실현' 의지를 보였다.

이 자리에서 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정책과 법,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그리고 예산 지원을 약속한 김관영 지사는 특히 태권도 관련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을 2024년 국가예산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국비 확보를 위해 무주군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비 지원 요청에 대해서도 청년농 육성과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은 전북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과 관련해 공조를 강조, 내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국비 확보를 위해 도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해줄 것을 건의했으며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의

이에 황 군수는 "지사님 방문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침체의 여파, 지역소멸 위기에 빠진 무주군에 활기를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평소 지사님의 무주군을 향한 관심 무주군에 대한 기대가 결국, 전북특별자치도로 새 지평을 여는 전북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는 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열린 청원과의 만남 시간에는 무주군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해 "도정철하 및 주요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도지사 특강을 들었으며 "전라북도도 함께 혁신, 함께 성공!"이라고 쓰인 손 피켓을 들고 전북 발전을 기원하는 '다짐 퍼포먼스'에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김관영 지사는 무주군 공무원들을 향해 "태권도의 고장 무주가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 특화산업과 관광산업의 중심지로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청년들이 돌아오고 경제에도 생기가 도는 등 변화를 거듭해 나가고 있다"라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무주의 담대한 여정이 항상 현재 진행형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청년 창업 스마트팜 무주원을 방문한 김 지사는 새로운 소비처 확보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으며 박철수 무주군산림조합장을 비롯한 목재문화체험장과 향토산류인뽕, 목재펠릿공장, 산림교육장 대표 등 무주군 산림관계자, 그리고 치유농업인(귀농인) 등과도 만나 시설 확충과 지원, 그리고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개공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심 집중'

도의회 인사청문회, 업무능력·도덕성 검증 실시
 이전 의혹·논란 등 문제 대상으로 심도있게 검증

전북도의회는 15일 최정호(66)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이병도)를 개최하고 최 후보자에 대한 자질을 검증했다.

최정호 후보자는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청문위는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 8명과 의장 추천 위원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했다.

지난해 11월,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자진 사퇴 이후 새롭게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청문회는 이날 하루 열리고, 청문 범위는 업무능력과 도덕성 등 2개 분야로, 오전에는 업무능력을 검증하고 오후에는 도덕성을 검증했다. 이 가운데 도덕성 분야는 비공개로 진행했다.

전문성 검증에서 이수진 의원은 "인사청문 제출자료가 기본적인 자료도 없이 매우 부실하며, 과연 인사청문을 받고자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러한 기본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과연 신뢰받는 공기업과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문승우 의원은 "직무 수행계획서를 보면 사업을 단순히 나열하여 3년의 일기등한 할 수 있는 중점과제가 없어 보인다"며 "지난 국토부에서의 주요 경력은 교통분야로 토지개발 등 지역개발사업 분야는 약한 거 같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의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

칙 중 특별공급 제도에 관한 문제점들이 많다"며 "국토부 차관 당시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해소되지 않은 의문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연 의원은 "제출된 자료를 보면 비전이 보이지 않고 막연한 계획만 있는데, 과연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 전북개발공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기 바란다"고 했다.

윤영숙 의원은 "전북개발공사는 수익성과 공공성의 조화가 필요한 공기업인데, 현재 공사의 부채 상환에 대해 정확히 파악이 안된 거 같다"며 "앞으로 늘어날 부채 위기관리에 대해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정규 의원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초등학교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규모 신축 단지 조성도 중요하지만 구 도시를 어떻게 리모델링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적극적인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정훈 의원은 "답변서를 보면 질의에 대한 구체성이 상당히 부족한 거 같다"며 "개발공사 사장이 된다면 인구 감소·유입 대책에 대한 적극적으로 고민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장영국 의원은 "익산시장 출마 당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국립항공사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져느냐"며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되더라도 책임과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직원 관리

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수봉 의원은 "전라북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에 따른 제출서류는 제출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며 "경력을 보면 대부분 공직 경험인데, 공사는 기업 경영 마인드도 필요한 곳으로 공직 경험과 잘 조화해 노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해석 의원은 "국토부 재직 시절 고속철도 민영화 정책을 추진한 것과 관련하여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 궁금하다"며 "공공성은 뒤로 하고 수익성만 중요한 철도 분리 정책으로 도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전북개발공사는 공공성과 사업성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기 의원은 "재민공 개발과 관련하여 전북개발공사에서 어떠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재민공 게이트웨이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고, 수익성을 위해 어떠한 시설을 유지할 것인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병도 위원장은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도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책임이 있는 사장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자질부터 경영총괄 등 역량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책임감을 느끼고 철저히 검증에 임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16일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 오는 17일 김관영 도지사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민주 윤준병 의원
 소비자권익증진상 수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15일, 서울 YWCA회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소비자권익증진상 시상식에서 '소비자권익증진상'을 수상했다.

2023년 소비자권익증진상 시상식을 개최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세계 소비자권익의 날을 맞아 국회에서 소비자 권익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해 입법·예산·지원활동 등에서 탁월한 실적이 있거나 노력한 국회의원을 심사·평가해 '소비자권익증진상' 수상을 선정했다. 이번 수상자로 선정된 윤준병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소비자와 관련한 입법 및 정책 개발,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윤 의원은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부터 민생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던 부분을 높게 평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소회를 밝힌 후, "계속해서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소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생활발전형·현장 중심형 민생정치 실현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태환 기자

“금연구역 지도·감독 철저하”

채영병 전주시의원, 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서



채영병 전주시의원, 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서

채영병 전주시 의원은 15일 열린 전주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전주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전주시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총 2만3,949개소의 금연구역을 지정했고, 또한 지난 2014년부터 금연구역도원을 채용해 흡연 단속을 수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해 2만7,747회의 지도점검을 통해 이루어진 과태료 처분은 단 33건에 그쳤다. 버스 승강장과 택시 승차대의 경우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옥마을, 금연 거리, 버스정류장 등에서 담배꽂이를 쉽게 발견했고 금연 거리 내에서 교복을 입고 흡연하는 청소년들을 목격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실정에도 금연구역을 단속하는 금연구역도원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전주시는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단속을 위해 실효성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현재 전주시는 단발적인 계획만 수립해 지도점검을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채 의원은 "실효성 있는 금연구역의 지도점검 및 단속을 위해 구체적인 금연구역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과 관련 부서와의 합동점검 추진이 필요하다"며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구체화해 관

리하고 업종별 지도점검 및 단속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품 및 아동청소년 부서, 경찰청 등 관련부서 협조요청을 통해 합동단속이 진행돼야 한다"며 "전주시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대한 과태료를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을 제한하기 위한 흡연 가능구역 지정도 우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채 의원은 "전주시민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해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금연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전주시는 시민건강을 위해 금연구역에 대한 적극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의회, 일본 전범기업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이행 촉구

전주시의회가 15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박형배 의원(효자동5)이 대표 발의한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최근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에 따른 것.

시의회는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고 피해 당사자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은 채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방법으로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에 즉각적인 철회와 일본의 전범범죄에 대한 공식적인 사죄 및 전범 기업들의 직접 배상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태 기자